



SUSREG 2022 연간 보고서

금융 규제 기관과 중앙은행의
지속가능성 활동 평가

작성자: Adam Ng, Siti Kholifatul Rizkiah, Maud Abdelli

지속 가능한 재정 규정 및 중앙은행 활동(SUSREG) 체계가 마련되기까지 많은 사람의 공동의 노력이 있었다. 특별히 SUSREG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주신 Deloitte 스위스의 지속 가능 재정팀(Jérôme Crugnola-Humbert, Kaja Brodtkorb, Antoine Wannier, Greta Cenotti, Maya Dyuzhakova, Aylin Noorda, Simon Heller, Marcel Meyer)에 감사드립니다.

프로젝트의 다양한 측면에 기여해주신 모든 전현직 WWF 동료들, 특히 Fatin Nabilah Fatah, Ristiyanti Hayu Pertiwi, Pina Saphira, Avital van Meijeren Karp, Maria Fernanda Contreras del Valle, Laurence Picton, Kristina Anguelova, Anders Nordheim, Edith Verhoestraete, Carolin Carella, Jochen Krimphoff, Hannes Peinl, Ivo Mugglin, Lennys Rivera, Magnus Emfel, Anshul Mishra, Rizkiasari Yudawinata, Debora Batista, Maxime Garde, Juan Barriga, Mariann Breu, Fungai Musana, Christine Mwangi와 익명으로 남고자 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WWF는 현행 및 예정 이니셔티브에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호주 건전성 감독청, 브라질 중앙은행, 말레이시아 국립 은행, 덴마크 국립은행, 네덜란드 중앙은행, 독일 연방은행, 홍콩 금융관리국, 인도 준비은행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이 보고서의 '인터뷰'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F는 초기 자문과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을 통해 SUSREG 체제와 평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더욱 신뢰도 높은 결과를 완성하는 데 기여해주신 개별 단체와 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 기후 이니셔티브(IKI)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독일 연방 환경, 자원보존, 원자력 안전 및 소비자 보호부는 독일 연방의회에서 채택한 결정 사항에 근거해 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후원:



이 보고서는 다음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작성되었다.

WWF 녹색 금융 규제 이니셔티브(https://wwf.panda.org/discover/our_focus/finance/greening_financial_regulation/)

아시아 지속 가능 금융 이니셔티브(www.asfi.asia)

제작 및 디자인:

Sweeta Patel(www.thecornershop.me)

2022년 12월 WWF 스위스 세계 자연 기금, 싱가포르 세계 자연 기금 공동 출판.

전체 또는 일부분을 재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표제를 언급하고 상기된 출판 담당자를 저작권 소유주로 명시해야 한다.

표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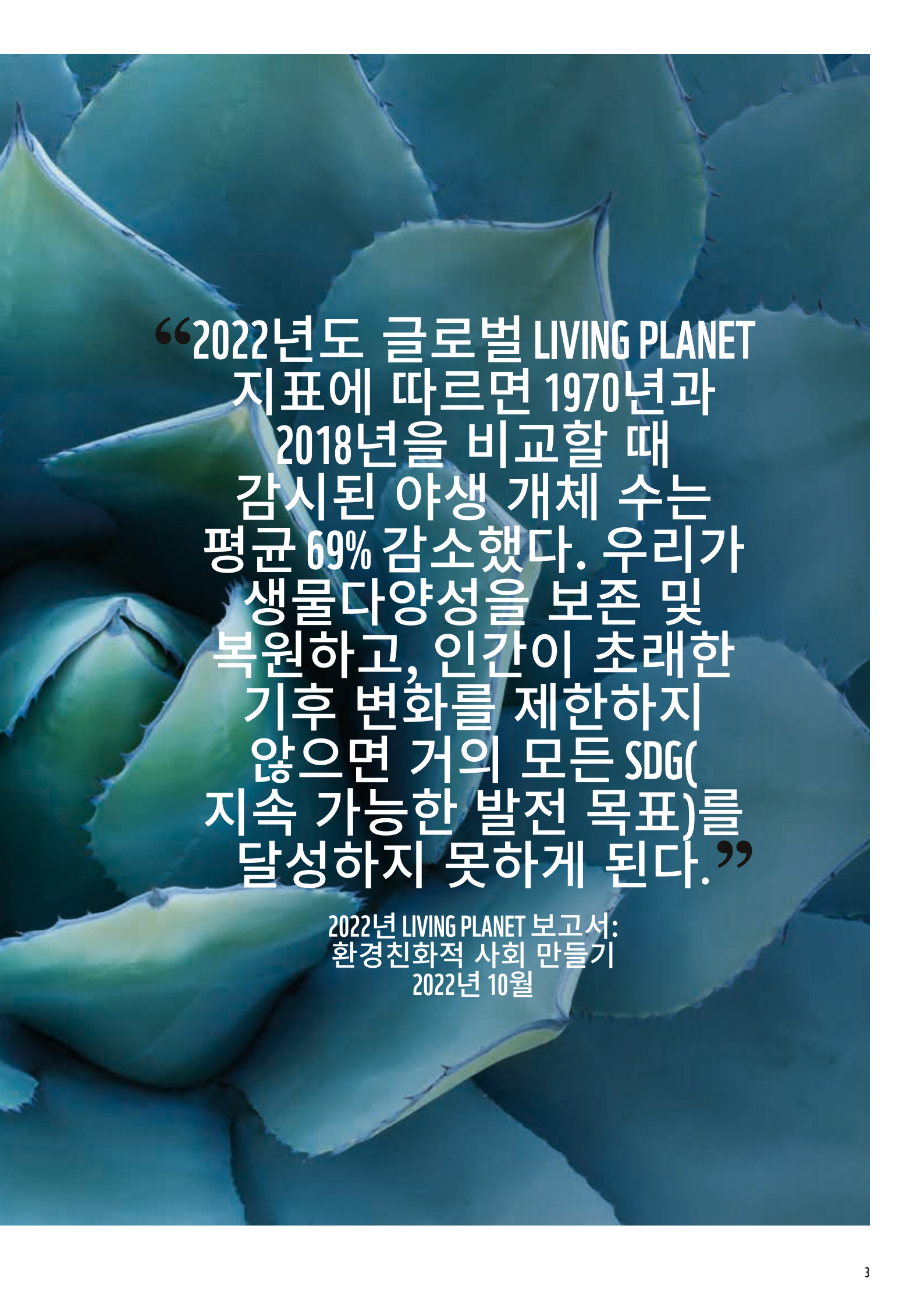
©Shutterstock - Sylvie Corriveau

WWF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정받고 가장 많은 경험을 쌓아온 환경 보존 단체로,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며 100여 개 국가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WWF의 목표는 지구 자연환경의 훼손을 멈추고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다. WWF는 10년 넘게 주요 금융 부문의 혁신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ESG 위험 요인과 기회를 주요 금융 정책에 통합시키고 전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안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WWF는 녹색 금융 규제 이니셔티브(GFRI)를 통해 중앙은행, 금융 감독 기관 그리고 필요에 따라 보험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기후,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요인을 지침과 운영의 고려 대상으로 완전히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GFRI는 SUSREG 도구를 통해 중앙은행과 감독 기관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내부 전문가와 외부 파트너를 활용해 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데이터, 도구 및 방법론에 과학적으로 근거하여 개별 금융 감독 기관, 중앙은행, 정책 입안자들에게 맞춤 지원과 교육, 워크숍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panda.org/gfri)를 참조하거나 gfr@wwf.ch로 사무국에 문의하시기를 바란다

저작권 © 2022 WWF-Switzerland and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Singapore) Limited



© Shutterstock - blueeyes



“2022년도 글로벌 LIVING PLANET
지표에 따르면 1970년과
2018년을 비교할 때
감시된 야생 개체 수는
평균 69% 감소했다. 우리가
생물다양성을 보존 및
복원하고,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를 제한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SDG(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2022년 LIVING PLANET 보고서:
환경친화적 사회 만들기
2022년 10월

개요

“오늘의 환경적 악영향은 곧 내일의 금융 리스크이다. 그리고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방관은 중립적 태도가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선택이다.”

WWF의 중앙은행 및 금융 감독 기관 로드맵: 탄소 중립과 네이처 포지티브 경제로의 이행 | 2022년 9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자연 손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 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기후 변화와 자연 손실은 금융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물가와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 기관은 각 기관의 정책 및 감독업무에 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대처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진행된 개괄적 분석에 따르면 여러 영역에서 금융 시스템이 자연에 노출되는 경우 거시 경제와 금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도상 국가에서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분류해 놓은 텍소노미를 개발하여 금융 기관이 기후 및 환경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를 충족시키는 활동에 자금지원 및 투자를 측정, 평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과학에 근거한 지표와 임계값도 '갈색' 분류법은 아직 '녹색' 분류법(텍소노미)의 필수 보완책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재정 안정성과 감독 대상인 금융 기관의 지급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안녕과 번성 전반에도 위협을 가한다.

과학에 근거한 국제 환경 보전 단체인 WWF는 녹색 금융 규제 이니셔티브(GFRI)를 통해 전 세계 중앙은행, 금융 규제 기관 및 감독 기관의 참여를 도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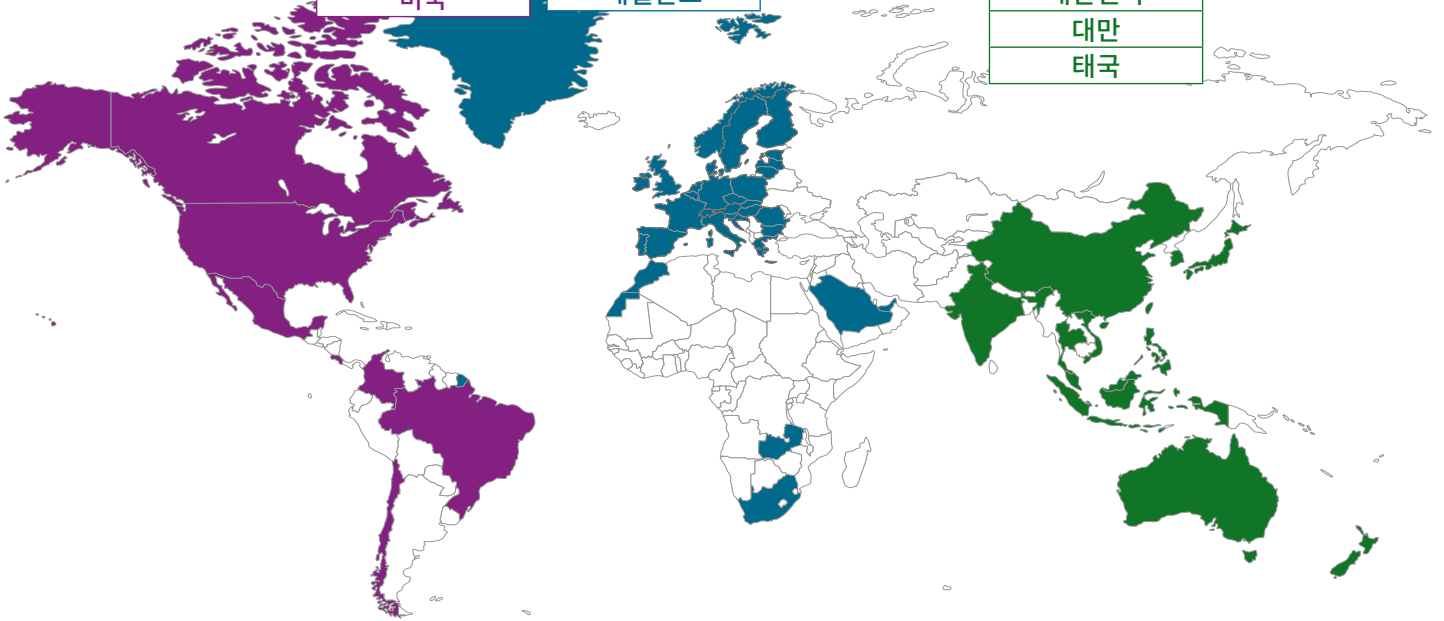
금융 시스템이 기후 및 환경 관련 위험 요인에 전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중립과 네이처 포지티브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022년 9월, WWF는 90개가 넘는 단체(학술계와 금융계의 썬크 탱크, 오피니언 리더 포함)와 함께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로 야기되는 두 가지 위기에 대처하는 예방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 기관에 호소했다.² GFRI의 중앙은행 및 금융 감독 기관 로드맵^{3,4}은 탄소 중립과 네이처 포지티브 경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 기관이 실행할 수 있는 단계들을 제시하고 있다.

WWF는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 기관이 두 가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 그리고 여러 활동과 일상 업무에 환경적 및 사회적(E&S) 리스크를 포함하는 방식을 더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SUSREG 추적시스템⁵과 연간 보고서를 통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한다. 올해의 연간 보고서는 모범 사례도 소개하며 네이처 포지티브 경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녹색 금융 규제와 중앙은행 활동의 맹점에 관해 설명한다. SUSREG 평가는 2022년에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 업계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였고 보험감독분야의 E&S관련 발전상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NGFS는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관련된 위험을 포함한 자연 관련 리스크는 거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면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개별 금융 기관은 물론 재정 안정성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중앙은행과 감독 기관은 운영 조치를 실행할 때 이러한 리스크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NGFS 특별 위원회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환경 관련 위험 요인' 지침 | 2022년 4월/2024년 4월

아메리카	EMEA		APAC
버뮤다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브라질	유럽연합	포르투갈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캐나다	독일	남아프리카	인도
칠레	그리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헝가리	스웨덴	일본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스위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케냐	UAE	뉴질랜드
미국 뉴욕주	룩셈부르크	영국	필리핀
미국	모로코	잠비아	싱가포르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만
			태국



2021년에 38개였던 평가 대상 관할권은 2022년에 북미, 남미,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 APAC(아시아 태평양) 내 44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이 범위는 전 세계 GDP의 88% 이상, 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의 72%를 차지하며 세상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17개 국가 중 11개 국가가 포함된다. 대부분이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국제 보험 감독자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환경친화적 금융 시스템을 위한 중앙은행 및 감독 기관 네트워크(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의 회원이다. 이 중 42곳의 국가는 은행과 보험 부문을 모두 평가했다(사우디아라비아와 잠비아는 은행만, 버뮤다와 대만은 보험만 평가).

“67 국가의 기업 부문에서 파리 협약의 1.5°C 목표에 부합하는 곳은 없다.”

목표 달성 실패: 2022년 글로벌 GDP 온도 등급 분석 | 2022년 9월

단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13 가지 권장 사항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 기관에 대한 최소요구 사항)



환경/사회 리스크와 기회를 통합한 전략 및 로드맵 수립

01.	<p>저탄소, 네이처 포지티브 경제를 위한 이행 계획 발표: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 기관은 본보기가 되어 자체적으로 명확하고 상세한 이행 계획(모든 중앙은행, 금융 규제 및 감독 활동을 아우르는 명확하고 계수화할 수 있는 기후 및 생물다양성 관련 2025년, 2030년, 2050년 목표 포함)을 발표함으로써 금융 시장 주체에게 분명하고 선제적인 필수 지침을 내려야 한다. 이 지침에는 금융권이 탄소 중립 및 네이처 포지티브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의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 기관은 규제 대상 금융 기관의 모든 투자, 대출 및 인수 방침과 관련하여 탄소 중립 및 네이처 포지티브를 목표로 하는 상세한 이행 계획을 매년 공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p>
02.	<p>과학에 근거한 기후/환경 관련 공식 기준 수립: 중앙은행은 2050년까지 넷제로 경제에 도달한다는 계획과 함께 1.5°C 또는 2°C 미만 시나리오 목표를 공식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2030년까지 네이처 포지티브 경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에 따른 목표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 전체 복원'이라는 명목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p>
03.	<p>자연 관련 리스크와 기회 고려: 중앙은행은 기후와 자연을 한 쌍의 위기로 인식하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기후 변화나 자연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 감독 기관 역시 미시적 및 거시적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와 자연 손실을 초래하는 금융권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산림과 녹지의 감소는 기후 변화와 자연손실을 악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경제와 보건을 위기에 빠뜨리는 다양한 현상(서식지 손실, 온실가스 배출 증가, 물순환 파괴, 토양손실)을 발생시킨다.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 기관은 산림파괴를 멈추기 위한 필수 조치를 취하고, 벌목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금융 기관이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 절차와 정책에 벌목과 야생 서식지 보전 문제를 반영하는 것을 최소 요건으로 삼도록 요구해야 한다. 금융 기관은 적어도 불법 벌목, 핵심 생물다양성 보존 구역, 보조 구역, 세계문화유산의 개발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중앙은행과 감독 기관은 생물다양성 손실에 노출된 분야와 자산에 대한 리스크 기반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프로젝트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프로젝트로 자본의 흐름을 재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독 기관은 금융 기관이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체제에 기반하여 자연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공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p>



감독(은행 및 보험)

04.	<p>명확한 최소한의 감독 E&S 요구 사항 규정 및 감독 요건 검토: 금융 감독 기관은 금융 시장에 필수적 신호를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수립, 규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금융 기관이 차별화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E&S리스크를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최소요구자본이나 자본 추가(add on) 방침(은행의 경우 유동성 비율 포함)에 반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감독 기관은 모든 정책수단(신용집중도 한도, 자본 보정, 유동성 요건 등)을 통해 '항상 환경에 해로운 요인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과 보험사의 인수 관련 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⁶</p>
05.	<p>기후 변화와 자연손실에서 촉발되는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거시 건전성 도구를 최대한 활용: 감독 기관은 건전성 규정을 만들어 특정 활동에 대한 금융 기관의 익스포저를 제한하고, E&S 관련 시스템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방지해야 한다. 장기적인 금융 안정 도모를 위해 은행과 보험사가 E&S 관련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거시 건전성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최소요구자본에 적용해야 한다.</p>



감독(은행 및 보험)

- 06. **기후 및 자연 관련 리스크와 기회 공시 의무화:** 감독 기관은 금융 기관이 연간 보고서에 E&S 전략과 그 수행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양적 항목과 질적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보고서에 직접 공개하거나 별도의 발행물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전략 프로세스에 대한 보고에는 관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과 그럴 경우 전략을 조정, 설정 및/또는 변경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감독 기관은 오픈 소스 솔루션을 홍보하고, E&S 데이터의 가용성과 품질 문제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감독 기관의 구체적인 권장 사항이나 실천 방안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모호한 장려성 발언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기후 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와 TNFD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체계에 기반한 공시 의무는 데이터 품질과 가용성을 향상할 수 있다.
- 07. **목표 설정과 텍소노미 지지** 감독 기관은 기후 및 그밖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 과학기반 기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최신 기후 환경 정보를 반영하며, 포트폴리오를 파리 협약의 목표에 맞추어 설정하고, 포트폴리오 단위의 과학 기반 기후 목표를 수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은행은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보험사의 경우 전체 인수 포트폴리오) 중 기존의 지속 가능한 활동 혹은 지속 불가능한 활동 분류법(텍소노미)에 따른 비중을 공시해야 한다.
- 08. **시나리오 분석 및 급변점(Tipping point) 측정:** 금융 기관은 과학기반 미래 지향적 시나리오 분석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중대한 E&S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계속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그린란드 빙원 용해, 서남극 얼음층 붕괴 같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급변점(Tipping point)도 고려해야 한다.



감독(보험 특정 사항)

- 09. **자산과 부채 간 일관성 적용:** 많은 경우, 보험 감독 기관은 전통적인 보험 활동(Underwriting)보다 보험사의 투자 활동(Investment) 분야에 대한 감독업무가 발달되어 있다. 보험당국은 보험사의 자산, 부채 양측에 대하여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보험사들이 자산 측면에서 이미 투자를 줄이고 있는 환경적으로 해로운 활동에 대한 인수를 부채 측면에서도 줄여야 한다.
- 10. **보호 격차 줄이기:**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의 붕괴 또는 AI 기반 인수의 발전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서 인구 중 일부(주로 가장 취약한 부분)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정부와 보험 감독 기관은 공공 민간 파트너십, 보험 지침, 상품 혁신, 자본 또는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이러한 보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결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1. **재보험 제도의 역할 이해:** 보험사들에게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민간이며 분산된 형태인 재보험회사의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재보험사는 여러 E&S 리스크(예: 자연재해)의 최종적인 보험 인수자가 되곤 한다. 보험감독당국은 E&S 문제와 관련된 재보험 시스템의 이러한 구체적 역할을 이해하고, 재보험사들의 전문지식을 필요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



중앙은행과 통화 정책

- 12. **중앙은행의 담보 체계와 자금중개지원대출에 E&S 고려:**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이라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 및 사회적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E&S 리스크를 관리하고, 저탄소 및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 담보 체계는 역사적 시나리오, 미래 지향적 시나리오, 양적/질적 항목을 포함하는 기후 및 자연 관련(예: 벌목 및 서식지 파괴에 리스크) 지표와 사회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E&S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E&S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자금중개지원 대출 혹은 선별적 신용공여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환경 조성

- 13. **정책 도구(지속 가능한 활동과 지속 불가능한 활동 모두를 포괄하는 과학 기반 텍소노미와 효과적인 탄소 배출 가격 책정) 사용:** 이러한 도구가 일관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된다면 다른 규제 조치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정책당국은 E&S 리스크와 영향에 관련된 공시원칙과 템플릿을 규정, 발표하고 기업에 E&S 관련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업이 매년 온실가스(GHG) 배출 정보와 기업의 자연 및 사회적 영향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공급망 가치사슬 데이터 공시를 장려해야 한다.

주요 현황

은행 및 보험

01.	규제 및 감독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1.1.0)*: 2022년 SUSREG평가에 참여한 감독당국 중 62%가 지속가능한 은행 규제 및 감독지침을 발표 및 적용하였다. 2021년 평가에서는 35% 만이 관련 규제를 발표 적용하였다. 2022년 SUSREG 평가에 참여한 보험 감독당국 중 약 62%도 관련 지침을 시행하였다.
02.	사업 및 리스크 관리 전략(1.2.1): 평가 대상 감독당국 중 84%가 금융 기관의 사업 및 리스크 관리 전략에 기후 요인을 완전히 혹은 일부 반영하였다.
03.	정책 및 프로세스의 통합(1.3.5.): 평가 대상 은행 감독 기관의 83%와 보험 감독 기관의 74%가 은행에 의사 결정과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정책에 기후 요인을 고려하라는 요건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04.	공시와 연간 보고서(1.6.4): 평가 대상 은행 감독 기관의 약 70%와 전체 평가 대상 보험 감독 기관의 약 56%가 기후, 환경 및/또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부분적으로라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05.	가격 정책 인센티브(1.4.12, 보험사 특정): 17개 감독당국(EU의 이니셔티브를 통한 EMEA 내 10개 지역 포함)은 보험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E&S리스크 완화를 위한 인수/가격 정책 인센티브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환경 조성

06.	탄소 배출 가격 책정(3.1.7): 평가 대상 국가 44곳 중 29곳(66%)은 탄소 배출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9곳의 감독당국은 자발적인 탄소 배출 가격 정책 시스템, 시범 계획 또는 한정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07.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성 전략(3.1.8):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기후와 관련해 국가 수준의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전략에 금융 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20곳뿐이다. 평가 대상 관할권 중 31곳은 국가적 네이처 포지티브 전략을 마련해 두고 있다.



© Shutterstock - Henryp982

괄호안의 수치는 지표 관련 순번(numbering)이며, 전체 지표 목록은 SUSREG 2022 연간 보고서 전문의 부록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차이와 은행에 요구되는 조치



감독 기관 요구 사항	차이	요구되는 조치
미시 건전성 감독: 정책과 프로세스	자연 관련 리스크 반영(1.3.6): 평가 대상 감독당국 중 약 20%만이 자연 관련 문제를 감독업무에 포함하고 있지만, 80%는 자연관련 문제에 대한 감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	감독 기관은 은행이 의사 결정,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정책에 별과 야생 서식지 개발 문제를 비롯한 자연 관련 리스크와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감독 기관은 은행에 TNFD 체계에 따라 자연과 관련된 주요 리스크 공시를 준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데이터 및 IT 인프라(1.3.11): 평가 대상 감독당국의 60%는 기후와 환경 리스크를 고려하는 데이터 및 IT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 사회 문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수행하고 있는 감독당국은 4곳뿐이다.	감독 기관은 은행이 은행 그룹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IT 인프라에 E&S 리스크와 영향이 효과적으로 수집, 통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것으로 요구해야 한다.
미시 건전성 감독: 포트폴리오 리스크 및 영향	기후 및 자연 목표 설정(1.4.4 및 1.4.5): 파리 협약에 부합하는 요구 사항을 적용한 감독당국은 온 전 세계에 2곳뿐이며 기후 이외의 부정적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한 감독당국은 1 곳뿐이다.	은행이 최신 기후 과학 정보를 반영하고, 포트폴리오 운용을 파리 협약(2°C 미만 또는 1.5°C로 온도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음)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기후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미시 건전성 감독(규정 기반)	최소 요구자본(1.5.2)과 유동성 비율(1.5.4): 최소요구자본과 유동성 비율에 E&S를 고려하는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진행 단계에 있으며, 평가 대상 감독당국 중에는 요구 사항을 완전히 적용한 곳이 없는 상태이다. 최소요구자본의 경우, 기후 관련 요건을 적용한 감독당국은 8개, 다른 환경 문제에 대한 요건을 적용한 곳은 4개, 사회 문제에 대한 요건을 적용한 곳은 2개로, 부분적으로만 기대를 충족하고 있다. 유동성 비율의 경우 4개의 감독당국에서만 일부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 감독 당국은 차별적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은행의 최소요구자본이나 자본 부가(add on) 방침, 유동성비율(유동성 범위 비율 또는 순간정자금 조달 비율)을 계산할 때 환경에 가장 해로운 영역(C&E의 경우)을 중심으로 E&S 리스크를 측정해야 한다. 이때 계산에 고려된 기후/E&S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시와 투명성	텍소노미 관련 공시(1.6.6): EMEA 내 감독당국의 60%, 특히 EU 지역에서는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 대비 텍소노미 상 지속 가능한 활동과 지속 불가능한 활동에 대한 비중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 감독당국에서는 명확한 요건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감독당국은 공식적인 텍소노미 (지속 가능 활동 및/또는 지속 불가능 활동 포함)를 마련해야 하며 은행은 이에 따라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 대비 텍소노미별 비중을 공시해야 한다.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전 세계적으로 최대한 비슷한 지방 또는 지역적 텍소노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간 보고서상 공시(1.6.4): 은행의 연간 보고서에 E&S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요구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평가 대상 국가 전체의 70% 정도가 기후, 환경 및/또는 사회 문제 관련 공시요건을 일부라도 적용하고 있지만, 미달성 목표나 측정방법 등에 관한 공시요건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요건은 아메리카(완전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없음)보다 APAC과 EMEA 지역이 좀더 앞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은 관련 목표의 미달 가능성과 목표에 미달할 경우, 어떻게 전략을 조정하고, 재설정할지에 대한 활동계획도 공시해야 한다. TCFD, TNFD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체계에 기반한 공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거시 건전성 감독	익스포저 한도 (1.7.5): 평가 대상 감독 기관은 은행이 특정 활동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건전성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2개 국가에서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음).	E&S 고려 사항에 근거해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 기관은 환경에 가장 유해한 활동에 대한 은행의 노출을 제한하는 건전성 규정 (단계적 중단 계획과 목표 포함)을 시행해야 한다.
	자본 요건에 제도적 E&S 위험 고려(1.7.6): 은행에 제도적 E&S 위험에 대한 거시적 건전성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정 자본 요건은 3개의 국가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은행의 자본 요건에는 특정 활동에 대한 금융 기관의 노출을 제한하고 금융 시스템에 제도적 E&S 리스크, 특히 기후 및 환경 리스크의 발생을 방지하는 거시적 건전성 예방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리더십과 내부 조직

차이	요구되는 조치
감독 기관의 E&S 전략(1.8.2): 평가 대상 국가의 감독 기관 중 17%만이 과학에 근거한 이행 계획이 포함된 공식 기후 전략이나 로드맵을 발표했다.	감독 기관은 과학에 근거한 이행 계획이 포함된 공식 E&S 전략이나 로드맵과 함께 그 지침을 따르는 탄소 중립 및 네이처 포지티브 금융 부문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를 공표해야 한다. 로드맵에는 관련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포함하고 E&S리스크와 영향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출처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 이니셔티브(1.8.8): 아메리카와 APAC 지역에 있는 13개 은행 감독 기관만이 E&S 데이터 품질 개선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권장 사항과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추가로 10개 국가에서 원칙적으로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구체적인 지원이나 권장 사항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감독 기관은 오픈 소스 솔루션을 홍보하는 등 E&S 데이터 가용성과 품질 문제를 개선하는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TCFD와 TNFD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체계에 기반한 공시는 데이터 품질과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중앙은행

감독 기관 요구 사항	차이	요구되는 조치
통화 정책	대출 체계(2.1.2): 중앙은행 대출 체계 대부분은 E&S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9개의 중앙은행(모두 EMEA와 APAC)만 이 영역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담보제도는 E&S요인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역사적 시나리오, 미래 지향적 시나리오, 양적/질적 항목을 포함하는 기후 및 자연 관련(예: 서식지 벌목에 따른 위험) 지표와 사회적 요인을 통합].
	보조금 지원 및 타깃 대출(2.1.4): 기후 요인을 고려하는 보조금 지원 대출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은 APAC 내 2개 국가뿐이다. APAC과 EMEA의 다른 3개 국가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분야/활동이 한정적이거나 사용되는 조건과 기준이 세부적이지 않다.	중앙은행은 E&S 고려 사항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원 대출 혹은 선별적 대상우대 재융자 상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후 관련 위험이나 벌목에 많이 노출되는 은행이 이러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예: 명확한 정책이 없는 경우), 보다 엄격한 재융자 조건을 정해야 한다.
리더십과 내부 조직	명목적 기준(2.2.2): 중앙은행이 목표의 일환으로 1.5°C 또는 2°C 미만의 명목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6곳뿐이다. 2050년까지 전체 생물다양성을 복원한다는 목표를 세운 중앙은행은 2곳뿐이다. 주요 목표에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1곳뿐이다.	중앙은행은 기존 목표 이외에도 과학에 근거하고 기후 및 환경과 관련된 명목적 기준을 정해야 하며 정부는 필요에 따라 중앙은행이 이러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Shutterstock – Veres Szilard

주요 차이와 보험사에 요구되는 조치

보험 감독

감독 기관 요구 사항	차이	요구되는 조치
미시 건전성 감독: 정책과 프로세스	자연 관련 리스크 고려(1.3.6): 전 세계적으로 보험사의 의사 결정, 위기관리 프로세스와 정책에 별목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감독 기관은 매우 드물다. 3개의 국가에서만(모두 APAC 지역) 이 분야에 대한 몇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감독 기관은 보험사가 의사 결정,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정책에 별목과 야생 서식지 개발 문제를 비롯한 자연 관련 리스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
미시 건전성 감독: 포트폴리오 리스크 및 영향	기후 목표 설정(1.4.4): 보험 감독 기관이 보험사에게 과학에 근거한 기후 목표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평가 대상 국가 중 인수 활동에 이를 요구하는 곳은 19%, 보험사 투자 활동은 14%뿐임). 주목할 만한 것은 소수의 EMEA 국가에서만 투자 활동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후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최신 기후 과학 정보를 인지하고 자체 포트폴리오에 파리 협약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도록 (2°C 미만 또는 1.5°C로 온도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음) 요구해야 한다.
	자연재해 보상 청구(1.4.7): 보험사에 자연재해와 관련된 추가 보상 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하도록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관할권은 평가 대상 중 4곳뿐이다. EU 텍스노미 규정 기준 중 한 가지가 이 보상 청구를 간접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위 내 EU 관할권은 이 지표를 일부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기후 변화와 자연 손실은 더 많은 재해를 야기하므로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추가 보상 청구를 시기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미시 건전성 감독(규정 기반)	기업 리스크 관리 체계(1.5.1): 평가 대상 국가 42곳 중 보험사의 기업 리스크 관리 체계(예: 자기 위험 지급여력 평가 - ORSA)에 E&S 항목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곳은 11개뿐이다(26%).	보험사는 기업 리스크 관리 체계(예: ORSA)에 단기적/장기적 E&S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기후 위기부터 출발하되 향후에는 자연 손실 같은 더 광범위한 사안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재보험사에 대한 요구 사항(1.5.3): 여러 가지 제도적 E&S 리스크에 대한 최종 보험금 지급사인 재보험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반영하는 요건을 규정한 관할권은 3곳뿐이다. 평가 대상 국가 중 나머지 39개 국가는 E&S 리스크와 재보험 제도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가능하다면 감독 기관은 재보험사가 여러 가지 E&S 관련 시스템 리스크(예: 기후 위기 및 자연재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최종 보험금 지급사로서의 역할을 반영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공시와 투명성	그린워싱 리스크(1.6.9): 대부분의 EMEA 국가들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투자 상품에 그린워싱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주로 EU 규정 때문에). 그러나 평가 대상인 APAC과 아메리카 국가들 중 이 사항을 다루고 있는 곳은 거의 없으며, 전통적인(비투자)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행동 리스크 감독 조항에는 저축 상품은 물론 전통적인 보험 상품과 관련된 그린워싱 리스크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거시 건전성 감독	익스포저 한도(1.7.5): 조사 대상 국가 42곳 중 보험사의 E&S와 관련된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특정 활동(예: 발전용 석탄)에 대한 익스포저를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곳은 3곳뿐이다.	E&S 고려 사항에 근거해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 기관은 환경에 가장 유해한 활동에 대한 보험사의 노출을 제한하는 건전성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은 구체적인 단계적 중단 계획과 목표를 포함하고 투자 활동과 보험 활동 모두에 적용해야 한다.
	의무적 보험 조치(1.7.6): 조사 대상 국가 42곳 중 보험사에 E&S리스크를 고려하는 의무를 어떤 형식으로든 규정하고 있는 곳은 4곳뿐이다. 기후 관련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험 조치는 여전히 일반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	감독 기관은 보호 격차를 줄이고(특히 사회적/재정적 취약 계층 고려) E&S 리스크와 관련된 의무적 보험 조치(혹은 유사한 구속력 있는 조치, 예: 비갱신 시 지불 유예)를 시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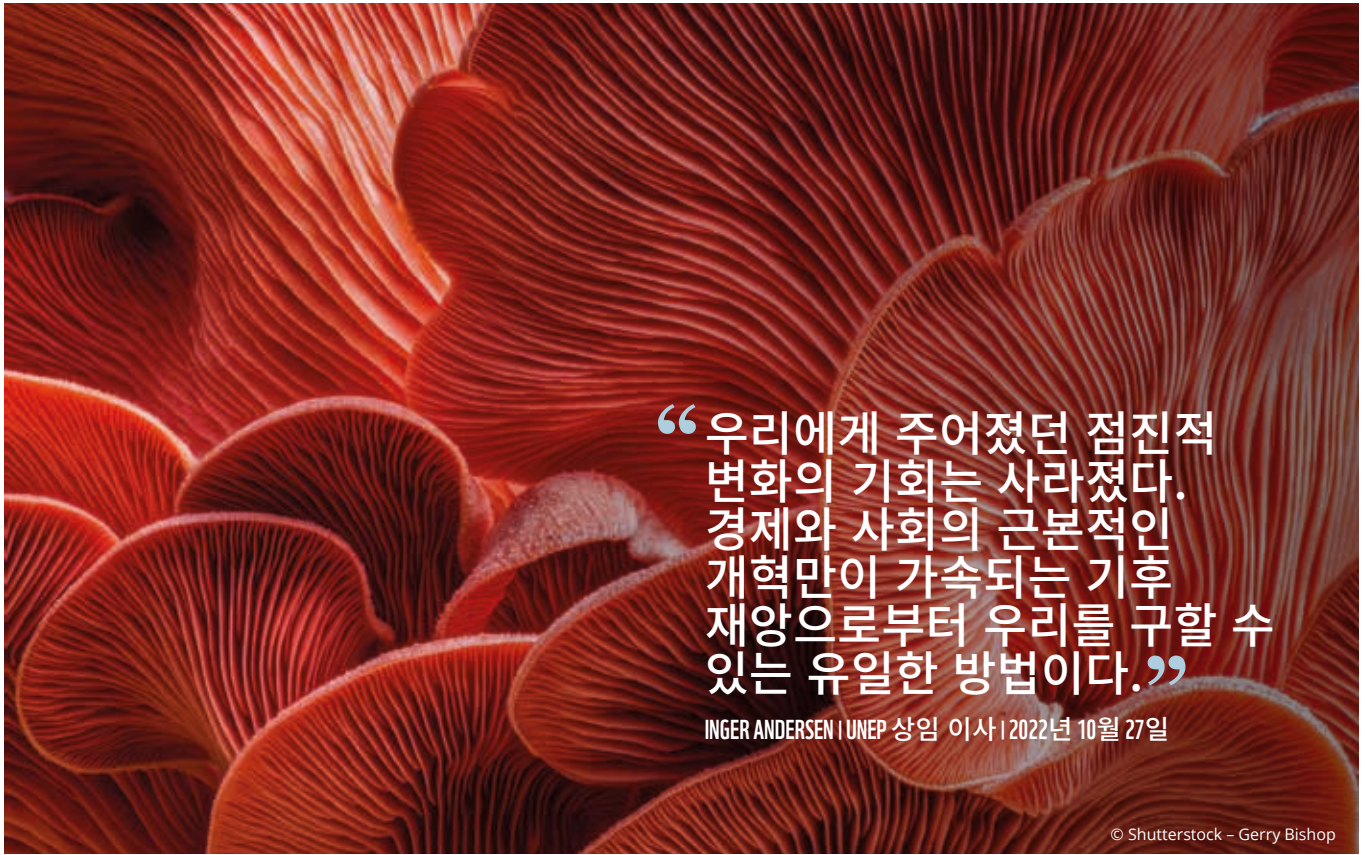
환경 조성 - 보험

차이	요구되는 조치
<p>공공 민간 파트너십(3.1.11i): 42개 국가 중 9곳에서 공공 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을 도입하여 E&S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보험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p>	<p>E&S 리스크를 고려하는 보험(예: 공동 보험폴)의 지속적인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민간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E&S 리스크의 의 특성을 감안할 때 PPS는 시장 메카니즘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p>

전반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금융 규정과 감독 요건의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주로 기후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은 전략과 거버넌스, 공시요건에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미국에서는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의 시범 정보 공개,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기후 정보 공개 제안, 혹은 TCFD의 기후 정보 공개 권장 등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건전성 조치는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주요 국가에서 정책과 프로세스에 위험 요인과 영향을 고려하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 보고서에 소개된 바와 같이 최신 모범 사례를 통합해 세계적으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증가하는 기후 및 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WWF는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 기관이 통화 정책과 규정, 건전성 도구를 최대한 동원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시기 적절하고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하고, 기후 이외의 사안과 광범위한 환경 및 사회적 주제를 아우르는 요건을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의 10년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대담하고 발 빠른 개입과 국제적인 협력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WWF는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이 2030년까지 네이처 포지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고, 205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함에 있어 SUSREG 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점진적 변화의 기회는 사라졌다.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만이 가속되는 기후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INGER ANDERSEN | UNEP 상임 이사 | 2022년 10월 27일

© Shutterstock - Gerry Bishop

* 참고: 미국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중복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WWF의 목표는 지구
자연 환경의 훼손을
멈추고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다.

© Shutterstock - Pernsanitfoto



Working to sustain the natural world for the benefit of people and wildlife.

together possible™ panda.org

참조

1. https://wwf.panda.org/discover/our_focus/finance/greening_financial_regulation/
2. https://wwf.panda.org/discover/our_focus/finance/greening_financial_regulation/?6242441/Central-banks-and-financial-supervisors-urged-to-step-up-action-on-nature-and-climate
3. https://wwfint.awsassets.panda.org/downloads/wwf_gfri_roadmap__august_2022_lores.pdf
4. https://wwfint.awsassets.panda.org/downloads/wwf_technical_background_report_2022.pdf
5. <https://www.susreg.org/>
6. https://wwfint.awsassets.panda.org/downloads/wwf_gfri_roadmap_2022_nov_2022.pdf